



경유택시의 국내운행 사실상 불가능

건교부, 지침 개정 통해 7. 12일부터 적용

한국LPG산업협회

2006.6.30일(금) 열린 경제정책장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장관들은 경유 택시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건교부는 유가보조금지급대상의 택시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택시로 사용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제2호) 중 경유사용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현재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택시는 계속 지급”을 추가한 개정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06.7.12)했다.

따라서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경유승용차 택시의 국내 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택시는 약24만여대로 대부분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일부 특수 지역에서 운행 중인 RV형 택시 및 콜택시 등 약500~600여대만이 경유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이들 경유택시는 계속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개정을 이끌어내기까지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해서 LPG업계는 물론 환경단체 등 관련 업계가 경유차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등 부작용을 정부에 알리고,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얻은 매우 소중한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우리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업계여러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